

이재명 대표 오늘 당무 복귀 '첫 메시지' 관심 집중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최고위 주재... '통합·민생' 투트랙 제시 관측 '가결과 5인방' 징계 청원 입장 주목...민생 투어 곧 재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한 달여 만에 국회에 복귀한다.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하다 지난달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실려 간 지 35일 만이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정치권은 이날 이 대표가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일단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통합과 민생'이라는 투트랙 메시지를 제시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당 전열을 조속히 단일체로 재정비하고, 밖으로는 민생을 챙기는 '대안 정당' 이미지를 부각해 사실상 총선 모드로 당 체제를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선 당무 복귀 후 첫 과제로 꼽혀 온 이른바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과 5인방' 징계 청원에 대한 이 대표 입장이 가장 주목된다.

징계 청원에는 지도부 답변 요건인 5만명 이상이 참여했는데, 그간 최고위원들은 당 윤리심판원 회부 결정을 미루며 이 대표의 복귀를 기다렸다. 일부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들은 이 대표 체포동

의안 과정에서 가결표를 던진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해당(害黨) 행위'를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당내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징계를 거론하기 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결집을 이끌기 위해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당 내외에서도 구속영장 기각, 강서구정장 보궐선거 압승으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탄탄해진 상황에서 반대파 징계라는 강경책은 당내 분란만 야기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현 전 국정원장은 22일 자신의 SNS에 "구속영장 기각 후의 이재명, 강서 보선 승리 후의 이재명은 달라져야 한다"며 국회 복귀에 따른 통합 행보를 주문했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도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무리한 징계는 당내 분열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 대표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을 강조하면서 징계청원 처리는 무기한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 대표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통합을 강조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이 대표가 보다 강력한 통합의 메시지를 내지 않고 의례적 수준에 그친다면 당내 갈등 요인이 잠복하게 되면서 내년 총선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대외 메시지 핵심은 단연 '민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원회의에서의 발언도 서민 경제난 해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강서구정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론이 국정 기조를 '민생 최우선'으로 전환한 데 따른 맞대응 성격도 깔려 있다.

이 대표는 단식 후유증에서 벗어나는 대로 '현장 최고위원 회의' 등 민생 현장을 도는 일정도 차츰 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취임 후 간헐적으로 진행해 온 이른바 '민생 경청투어'도 적절한 시점에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강점은 현장성과 속도감에 있다"며 "이 대표가 통합의 메시지로 당의 결집을 이끄는 한편 민생을 챙기며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인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유리한 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김승희 사표 수리는 은폐 시도"

"전 대통령비서실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의혹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이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으로 사표를 내고 대통령실이 이를 즉각 수리한 것을 두고 "엄중 대응"이 아니라 "은폐 시도"라고 지적했다.

권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표 수리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을 중단시킨 것은 '권력형 학폭 은폐' 의혹의 진상 규명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겨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이 제기된 후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으나, 김 전 비서관이 사표를 내자 곧바로 이를 수리한 바 있다.

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엄중하게 대응하려는 차원'이라며 '중징계 사안에 해당하지 않아 사표 수리에 문제가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무엇을 점검하고 확인했기에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인가"라고 했다.

이러 "5년짜리 권력의 위세가 그렇게도 등등한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온 국민이 이 사안에 주목한다는 것을 직시하고,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복송금 의혹 사건을 중앙지검에서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 검찰특별재정립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수원지검은 새로 부임한 이정섭 2차장검사 산하에 총 3개 부서, 검사만 21명에 달하는 이 대표 관련 전담수사팀을 꾸렸다"며 "더 강력한 감압수사로 없던 증거라도 만들 건가"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국감 브리핑

"도서관 도서열람 제한, 심의위서 결정해야"

이병훈 "시민·전문가 참여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동남) 국회의원이 22일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제출한 국감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립중앙도서관은 음란, 선정성, 비공개 요청 등을 이유로 352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185건을 관장 직권으로 열람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도서관은 소장 도서의 이용을 제한하면서 내부규칙에 근거해 도서관장의 결정으로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되는 도서 중 음란, 선정성 수위가 높은 연속간행물과 저자의 비공개 요청 등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2021년 아동 성추행 동화작가가 문제가 된 후 성범죄, 성추행, 인종차별 작가에 대해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



두 도서관의 열람 제한의 절차와 방법은 도서관 성격으로 인해 다르게 이뤄졌다. 납본도서를 성인 대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에는 폐가제로 운영되는 도서관 특성상 홈페이지의 열람 대상 목록에서 해당 도서를 제외한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 이용 제한 도서를 열람, 대출할 수 없다.

이병훈 의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이용제한의 기준은 저자가 아닌 저작물이어야 하고, 관장이나 해당 직원이 결정하는 것보다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서관이용심의위원회를 제도화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여수 여자만 갯벌 유네스코 잠정목록 등재 환영"

김희재 "해양관광도시 조성"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 국회의원은 22일 여수 여자만 일대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등재 확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문화재청은 20일 "세계유산 잠정목록(Tentative List)으로 제출한 '한국의 갯벌 2단계'가 세계유산센터 누리집에 게시됨으로써 잠정 목록에 등록됐다"고 밝혔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있는 유산들을 충분한 연구와 자료 축적 등을 통해 앞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예비목록이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유네스코 심사절차에 새로 도입된 '예비평가'의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소 1년 전까지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만이 세계유산 등



재를 추진할 수 있다. 이번에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록된 '한국의 갯벌 2단계'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로의 중간기착지로서, 대체 불가능한 철새 서식지의 보전에 기여하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유산이다.

현재 여수, 고흥, 무안 갯벌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상유산은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계획이다. 김희재 의원은 "전남도와 여수시민이 노력해 유산 등재가 이뤄진 것은 물론, 여수 여자만 일대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공식 등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여수 여자만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통해 여수를 세계적 해양관광문화 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치 여론조사, ARS 없애고 전화면접만 실시

한국갤럽 등 국내 여론조사 회사 34곳이 정치·선거 여론조사를 할 때 자동응답서비스(ARS) 방식을 없애고 사람(조사원)이 진행하는 전화 면접 조사만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여론조사 응답률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경우 최소 10%를 넘도록 했다.

국내 조사 기관 34곳이 가입해있는 한국조사협회(KORA)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갤럽, 넥스트리서치, 리서치앤리

서치, 엠브레인퍼블릭, 한국리서치 등 34개 조사기관이 발표하는 대통령 국정 지지도, 여야 정당 지지율, 총선 관련 여론조사 등에 이런 기준이 적용된다.

부재중이거나 통화 중인 조사대상자에게는 3회 이상 재접촉을 시도해 최초 조사대상자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기준에 담겼다.

조사 결과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정수로 제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20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도움이 필요한 느린학습 아동이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동 지원내용

-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중 인지·학습·정서·사회성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
- 전문인력(현장교사) 양성 및 파견**
느린학습자 특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1명의 현장교사가 파견
-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인지·학습 강화 프로그램(주 2회)
 - 정서·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주 1회)

사업수행체계

지원 : 복권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기금)
관리·사업수행 :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사업참여 :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참여아동 160명

아동지원체계

현장교사양성 > 지역아동센터파견 > 아동 프로그램지원 > 사회 구성원의 기본 역량 향상

본 사업은 **보편적교육**이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복권기금** 지원으로 **경제선지능아동(느린학습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사회적 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복권위원회 | 사랑의열매